

-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일본과 상당히 다르나 2026년경에는 일본과 같은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게 되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
 -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,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, 부동산에 편중된 개인자산, 은퇴문화 미정립 등 일본과 상황이 판이하게 다름.
 - 하지만 13년 뒤에는 베이비부머가 전기 고령자 그룹을 형성하고, 현재의 고령자가 후기 고령자 그룹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매우 유사함.

-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고령화대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관련 법 및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,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, 지속가능한 복지정책과 고령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
 - 총리실 주도로 국무총리가 수반이 되고 경제부총리가 실무책임을 맡는 고령화대책 컨트롤타워를 수립
 - 고령자를 세분하여 베이비부머의 경우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하도록 적극 지원하되, 빈곤하거나 장애가 있는 고령자의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제고
 - 고령자의 취업, 의료, 학습 및 사회참여, 생활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